



# 예견된 통일, 통합과정의 혼란을 극복하는 능력 고양을 위하여

글 · 위정희 (사)경실련통일협회 사무국장

반세기에 걸쳤던 비이성적인 냉전사상과 광적인 남한식 반공주의에 순치된 한국인의 의식 형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단안(單眼)적 사물 판단이다. 국제사회의 제반 문제를 오로지 반공주의라는 하나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개개의 사물, 현상, 관계를 평면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비(非)원근법적인 단면적 시각으로 관찰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남한의 지식인들에게 이 같은 인식 능

력의 결핍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남북문제이다.(리영희, 1996년, 경실련통일협회 제1기 민족화해아카데미 첫머리에서)

1996년 (사)경실련통일협회의 시민 대상 통일교육인 제1기 민족화해아카데미는 리영희 선생님의 흑독한 한마디로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 4월 29일 제22기를 맞이한 민족화해아카데미 개강 강의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분단 해소의 어려움은 분열된 두 주권국가의 존재로 상징되는 - 지역적 분단과 상이한 삶의 양식을 지닌 - 두 사회 구성체의 분열적 존립 그리고 갈등과 대립으로 상징되는 - 남과 북 사이의 적대성 등 중층적 구조로 인한 것이다.”라며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14년 전의 인식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듯이 통일의 과정을 실행하는 데에 정치·이념적 인식의 틀의 변화는 없어 보인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지만,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이며, 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개인은 크게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개인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정책의 변화들에만 민감해 있다.

이렇듯 인식의 폭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의 이념적 경향성에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접목시키기 쉽지 않은 사안인 ‘남북통일’ 문제는 어쩌면 그 자체가 시민교육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통일협회의 시민 대상 통일교육인 민족화해아카데미는 한 해도 빠짐없이 지속되어 왔으며, 어떤 해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강좌(평균 10~15강)를 진행하기도 했다. 우선 민족화해아카데미의 그 역사성과 지속성은 박수를 받아도 좋을 것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통일

운동을 시작한 것은(1994년 (사)경실련통일협회 창립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실사구시적 통일운동을 전개해 민족통일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친북 좌파, 중북세력 등 오해의 시선이 아닌 통일운동에의 시각을 ‘건전하고 자유로운 의제 형성 및 의사 표현’으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남북 간 민족화해와 협력’,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한 통일과정에서의 시민공론의 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시민 대상의 통일교육인 ‘민족화해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통일교육, 민족화해와 협력 방안 마련을 통한 평화통일 과정의 설정**

서두에 언급한 리영희 선생님의 일성을 되뇌어보면, 오늘날의 남북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시각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쳐 오면서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 사업, 주변국 포함 6자회담 실시 등 눈에 띄는 정책적 변화가 많았다.

하지만 북의 두 번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 발사, 서해 교전 등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로 인한 대북정책 변화의 제자리걸음 등으로 대북관(對北觀)은 이질감을 가진 채 합리적 합의 과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니 어쩌면 합리적 합의가 불가능한 부분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남북당국 간 정례회담과 활발한 민간 교류는 통일을 앞당겨 민족적 과제를 우리 세대에 실현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당국 간 대북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여러 합의들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서 통일 - 평화 - 인권을 생각하는 시민단체들은 한편으로 ‘남북기본합의서(1991년)’에서 언급한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이고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한 대로만 남북관계가 인식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갈등과 대립의 조정자 역할을 할 ‘통일 일꾼’ 양성은 더욱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단체들이 활발하고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민족화해아카데미를 통해 남북을 둘러싼 정세 이해, 민족 간 화해협력을 강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모색, 그리고 대북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상호 이해와 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가진 통일 일꾼 양성을 통해 시민 참여형 통일과정을 준비하는 데 일조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일반 시민 대상의 통일담론 대중화 성과 커**

올해로 22기째 맞는 민족화해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살펴본 민간단체들의 통일이카데미는 우선 통일에 대한 편파적 반공주의적 사고를 벗어나 조금씩 상호 이해와 화해 대상으로 일반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비정기적, 일회성 동원 강연, 정책 토론회, 분단 현장 방문, 안보 중심 교육 등을 진행하는 일반적 프로그램과는 달리 통일과 한반도 미래에 관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대담을 통해 ‘통일론’을 만들어 나가거나, 혹은 개개인 내부의 통일관을 수정해 나가는 전문교육 프로그램 성격의 강좌들이다.

세 번째로 흡수통일이나 예멘식 통일, 독일식 통일 등 다양한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혀감으로써 ‘우리식 통일’의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다.

민족화해아카데미 강좌의 내용적인 면을 보면 초창기 담론적 사고의 분단의식 극복에 초점이 모아졌던 것이 특징이었다면, 회를 거듭할수록 정책 변화를 입



고 정세 변화를 제대로 분석하여,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정치평론적 시각을 심어주는 데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 사회, 문화적 자료를 통한 이해 및 남북경제협력의 실효성, 북한 주민 생활 이해와 식량난 해소방안의 모색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계 구축의 필요성,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로의 민간 차원의 통일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북 관련 이슈에 대한 편향성 극복 및 실사구시적 대북관 확립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민족화해와 평화통일교육 對 북한실상교육과 안보교육**

경실련통일협회를 포함한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은 민간의 합리적 대북관을 형성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지역과 계층의 이해를 벗어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시민 대상의 평화의식 고취를 위한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자율성은 정부의 성향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요소임이 현 정부 들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민간의 다양한 통일교육(특히 지난 10년 간 진행해 온 통일교육은 그 이전 정권 하에서의 일방적 반공교육을 갖 벗어난 걸음마 단계)이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제22기 민족화해아카데미

지난 10년 간의 통일교육이 ‘남북관계 진전과 남북 교류협력의 측면을 강조’했다면, 현 정부는 ‘북한의 실상과 안보 측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의 입장에서 통일부 - 통일교육원 - 통일교육협회의 방향성과 내용이 크게 선회한 측면이 있다. 현 정부는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을 제시하고 있지만 1990년대 이전의 ‘반공·안보교육’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지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제시하지 않고, 정책 담당자의 구두 전달 등을 통해 ‘좀 달라져야’ 함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혹자는 안보교육을 반공교육으로의 회귀로 이해하기도 하고, 전(前) 정부의 화해협력 중심교육에 대한 보완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향성의 혼재는 공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크게 영향 받지 않는 민간단체들의 통일교육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통일교육의 방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반공 및 승공통일교육, 안보교육, 통일 및 안보교육, 민족통합적 통일교육으로 변화해 왔으며, 2000년대 이후 민족공동체교육, 탈분단교육, 다문화이해갈등해결교육, 북한이해교육 등의 유형이 등장하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교육과 민간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통일과정 중시’, ‘남북 간 서로 다른 문

화와 생활방식 이해와 존중’,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식’ 등 사회와 사람의 통합을 강조하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이고 다양한 유형이 나타났다. 통일교육의 내용과 유형도 평화교육, 갈등해결교육, 다문화이해교육 관점에서 상호 간 이해, 배려, 설득, 소통 등의 능력을 배양하여 ‘남북공존’과 ‘분단극복의 평화적 과정 이해’를 통해 통일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다양한 유형의 형성은 정부 중심의 대북관에서 시민 중심의 대북의식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미래세대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다양한 유형의 변화가 촉진되지는 않을 것 같기에 ‘건전한 안보’, ‘균형 있는 북한관’에 대하여 반공으로의 회귀를 염려하는 시선이 존재한다.

**통일교육거버넌스, 진정한 자리매김 한계 노정**

지난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지원법) 제정은 정부 정책의 일방성과 민간조직의 정체성으로 인한 시민들에 대한 통일에의 보편성을 침해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통일교육이 가능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낳았다.

특히 통일교육거버넌스의 방향성으로서 지원법에 의하여 2000년 ‘통일교육협의회(2010년 현재 64개 민간단체 참여, 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그 독자성을 확보하여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민간단체들의 매칭펀드 형식의 통일교육지원사업을 해 왔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의 안정성, 지속성, 전문성과 지역 통일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청소년, 대학생, 여성, 기업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체제에서의 통일 등으로 다종 다기한 통일교육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9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촛불시위참가 단체 배제 등의 요구로 통일교육협의회에서 19개 회원 단체가 현 정부의 정책 변화와 통일교육거버넌스의 운용에 한계를 드러낸 협의회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조직적으로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통일교육의 민간 중심 - 정부 지원’의 접목 형태의 실험은 일단의 평가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통일교육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제대로 세워내야 할 사회통일교육을 전담하는 기관들의 공통 과제이다.

**민주시민교육이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통일은 예고 없이 주어지는 38경계선을 허무는 것만으로 볼 수 없다. 통일은 분단극복의 과정과 사회통합의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의 참여와 구체적인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목표는 상호존중이 불가능한 이념적 테두리 내에

정체되어 있는 자기의식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성향을 보편적인 가치체제로의 점진적 변화를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강조되는 사회통일교육에서의 기본은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이 함께 담겨야 한다. 통일교육은 분단 극복의 과정과 통일, 그 이후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원적 사고’, ‘균형적 이해력’, ‘포용적 태도’, ‘가치의 존중과 이해’ 등 민주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배양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자칫 통일교육이 ‘통일’과 통일정책의 이해가 전부인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또한 통일교육이 정부의 대북정책 홍보와 혼용돼서 쓰여져도 안 된다. 통일교육은 통일된 한반도의 구성원으로서의 진정한 통합에 기여하는 개인이 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

◎ **경실련통일협회 2010년 제22기 민족화해아카데미 프로그램**

일자	시간	강 의 명	강 사
<b>개강식 및 기초강연</b>			
4/29	19:00~21:00	한국의 분단과 현실 인식, 그리고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역할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b>분단에의 인식과 현실</b>			
5/4	19:00~21:00	전후세대의 분단 인식과 통일의 자세	조희제(서울생활과학고)
5/6	19:00~21:00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보는 통일문제	김홍광(NK지식인연대 대표)
5/11	19:00~21:00	분단과 해외동포	진희관(인제대 통일학부)
<b>분단과 남북의 교류</b>			
5/13	19:00~21:00	분단의 트라우마, 기억의 고통	유임하(한국체육대 교양학부)
5/18	19:00~21:00	남북교류 현장 - 경제공동체를 꿈꾸며	김성원(호상기업 대표)
5/20	19:00~21:00	대중문화 속에 그려진 분단과 남북관계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b>분단을 넘어, 경계를 넘어</b>			
5/25	19:00~21:00	분단의 개인화, 통일에의 인문학적 모색	김성민(건국대 철학과 교수)
5/27	19:00~21:00	접경지역 현장 - 민족공동체를 꿈꾸며	노귀남(동북아미사사회연구소)
<b>수료식 및 종강강연</b>			
6/1	19:00~21:00	남북 현안과 우리 시대 통일과제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료식	선월몽산(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축성사 주지)